

# 이 대통령과 실용주의 정책 '한 뜻'

### 민주 이원택 의원, 현장 기반 정책·제도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 유치 토대 만들어 이 대통령, 새만금 글로벌 산업 거점 육성 철저히 준비... '준비해온 리더십' 발휘

민주 이원택 의원이 27일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해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과 '준비된 이원택 의원'의 실용주의적 동반자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 의원의 '준비된 정치'는 민생정치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대비와 점검, 강력한 집행 의지를 담보로 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방향을 설정하고 판을 짜는 설계자형 역할을 보여왔다면, 이원택 의원은 현장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를 미리 갖춰 온 전략가 역할을 하면서 이번 현대차 유치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과정에서 '준비해온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



준비해왔다.

특히 현대차 그룹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확정 짓는 과정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결단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장을 기반으로 정

취한 가운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념보다 효과'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철저히

책과 제도를 미리 갖춰온 '준비해온 리더십'을 보여줬다. 청와대 재직 시절 새만금에 수변도시를 추진한 것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번 현대차 유치가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또한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탄소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감안,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20GW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현대차 유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부터 새만금 계획에 그린수소 실증단지, 수소 대량 생산기지가 반영돼 있으며, 부안 고장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새만금신항의

수소 전용항 기능 등 수소 기반이 충분한 걸 들어 투자를 주문해 왔다.

또한 새만금 내측에 무인 이동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있고, 새만금 방조제 주요 도로에 전기차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돼 있어 현대차가 추구하는 로보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원택 의원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온 동반자적 '실용주의'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꽃을 피우고, 봄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현대차의 새만금 10조원 투자는 '현대차의 힘'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새만금은 현대차에게 단순한 공장부지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이원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준비해온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투자 과정에서 '준비해온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

## "전북 미래·균형발전 초석"

### 민주 도당, 이 대통령 타운홀미팅 관련 "도민 삶과 직결... 중앙정부와 함께 실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날 27일 임박한 타운홀미팅이 전북의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타운홀미팅이 단순한 지역 방문을 넘어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설계한 실질적 공론의 장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질문과 제안을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점검한 점은 과거 상징적 방문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산업전환, 농생명 산업 고도화, 교·물류 인프라 확충 등 전북 산업구조 대전환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직접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북도당은 특히 새만금에 3.3기 가와트(GW) 규모의 전력 인프라

를 구축하는 계획이 첨단 산업 유치와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5조8,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역시 인공지능, 로봇, 자율제조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윤러 헬프 산업클러스터 조성 과 K-푸드 수출 허브 구축, 스마트 팜 확대, 국가스마트클러스터 고도화 등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민 토론 과정에서 무주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촌기반 소득 지원을 받게 된 것 역시 실질적 성과로 언급했다.

전북도당은 "논의된 사업들은 도민 삶과 직결된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와 함께 전북의 미래 산업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대한독립 만세"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석규 애국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 군산시의회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진심으로 환영"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26일 군산시 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결정은 단일 기업 투자로는 전북 역사상 최대 규모로 우리 시가 과거의 제조 중심 산업에서 AI·수소·로봇 중심의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특히 이번 투자 결정으로 향후 약 7만 명 규모의 고용 창출과 협력 기업 입주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며, 지역 인재의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군산의 청사진을 새로 그리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상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투자의 결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 간의 동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투자 결정이 지역 경제 제도의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의 확고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는 더욱 군산시민의 역할을 결집해 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 비수도권 1월 주택 인허가 7895호 전년비 ↑

### 국토부, 주택통계 공표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에 올해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1월 인허가는 8,636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 서울 지역 1월 인허가는 1,226호로 전년동월 대비 55.9% 감소했다.

비수도권 1월 인허가는 7,895호로 전년동월 대비 7.8%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수도권 1월 착공은 7,529호로 전년동월 대비 88.9% 증가한 가운데 서울 지역 1월 착공은 741호로 전년동월 대비 63.7% 감소했다.

비수도권 경우는 1월 착공은 3,785호로 전년동월 대비 38.9% 감소했다.



수도권 1월 분양은 6,040호로 전년동월 대비 67.0% 증가했으며 서울 지역 1월 분양은 959호로 전년동월 대비 12.6% 감소했다.

비수도권 1월 분양은 1,860호로 전년동월 대비 51.3% 감소했다.

수도권 1월 준공은 1만1,660호로 전년동월 대비 27.3% 감소, 서울 지역 1월 준공은 3,817호로 전년동월 대비 19.8% 감소했다.

비수도권 1월 준공은 1만680호로 전년동월(25,692호) 대비 58.4% 감소했다. /권희성 기자

## 도, 가축질병 특별방역 31일까지 연장... 재난형 질병 차단

### 집중소독·예찰·점검 강화로 발생 요인 사전 차단

전북특별자치도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2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철새 이동이 마무리되고 질병 발생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방역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거점소독시설 30개소를 상시 가동해 축산 관련 차량과 사육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현

장 점검과 예찰 활동을 지속한다. 전 화 예방과 문자 안내 등 농가 대상 홍보도 병행해 방역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집중 사도 지속한다. 특히 농장 내·외부와 주변 환경에 잔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 위험에 대비해 가금농가 소독과 차단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양돈농가 주변 집중 소독과 방역

대·역학 관련 농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장 종사자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예방 조치도 철저히 시행한다. 또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양돈농가 일제검사(폐사체·환경시료)를 주 1회 추가 실시해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를 병행한다.

구제역은 당초 3월 한 달간 예정됐던 일제검사를 15일까지 조기 완료한다. 유예·누락 개체와 한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강검종과 확인검사를 강화한다.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환경감사도 병행해 도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 민주 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이 지난날 27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및 지역 의대와의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연구 중심의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대신 졸업생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별도로 매년 100명 규모의 정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남원) 설립은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이 결정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며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당은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 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박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며 입법을 다시 추진해 왔다.

현 정부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기관 확대, 인력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 "국민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정의"

### 민주,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사법 대전환 시대 열렸다" 법 외곽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날 28일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법률의 가치가 우리 사법 체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정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 3법 완성으로 국민 권리 향상과 법치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언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도적인 법령 왜곡 적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헌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완화해 재판의 속도와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가 더 신속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며 "사법개혁 3법을 통해 헌법의 가치가 우리 사법체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시행과정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원 정부를 연 시대적 요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며 개혁과제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서는 법 외곽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